

2008 서울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08.7.20 시행)

1. 다음 중 개방형 인사관리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조직의 관료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내부승진 기회 확대로 공직자의 사기 제고에 기여한다.
 - ③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 ④ 임용의 융통성을 증대한다.
 - ⑤ 적극적 인사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 (답) ② 개방형은 외부인의 채용으로 내부승진 기회가 제약되어 재직자의 사기가 저하된다.
- ☛ 2009 9급 선행정학 p.823

2. 다음 중 지식관리의 효과가 아닌 것은?

- ①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 ②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확대 재생산
 - ③ 지식 조직의 공동재산화 촉진
 - ④ 조직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 촉진
 - ⑤ 학습조직의 기반 구축
- (답) ④ 조직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 촉진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정리> 전통적 관리와 지식행정관리의 비교

구분	기존 행정관리	지식 행정관리
조직 구성원 능력	조직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관성으로 소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1)
지식공유	조직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 파편화	공유를 통한 지식 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지식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지식활용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조직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조직 기반 구축

1) 업무(일)의 분업에 의한 전문화가 아닌 사람(人)의 전문화를 의미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 p.1257

3.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이 아닌 것은?

- ①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제이다.
 - ② 각종 평가의 통합 실시이다.
 - ③ 성과관리 강화이다.
 -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설치이다.
 - ⑤ 국무총리 상위 평가기능 강화이다.
- (답) 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2001년 제정되었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2006년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담긴 기본방향을 묻는 문제로서 법 제정취지와 정신에 따라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과거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즉 현행 우리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서의 자체평가제도 내실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⑤의 경우 법 제17조에서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평가로 볼 수도 있으나 국무총리실은 단순히 '자체평가결과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신뢰성 여부 확인 등'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우세하고, 더구나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취지로 보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시정조치나 해당기관의 재평가를 요구해야지 직접 재평가를 실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국무총리실의 재평가가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법 제정당시 정부가 발표한 제정취지와 주요골자에도 총리실의 재평가를 강조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 법의 제정당시 정부가 발표한 제정취지와 주요골자이다.

<참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취지와 주요골자 (법 제제 및 국무총리실 발표)

(1) 제정취지

그간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 ①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 정부업무평가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②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③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 및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⑤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서의 자체평가제도 내실화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자체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체평가계획을 스스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⑥ 통합적 국정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 여러 기관이 협조하여야 하는 정책 등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도록 함.
- ⑦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공공기관의 특성·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복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 그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⑧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 지원 : 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평가방법·평가지표 등을 개발·보급하며, 평가전문인력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⑨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정책 등에 환류되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인사 등에 연계되도록 하며, 우수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2009 9급 선행정학 p.470

4.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정책대안의 결과에 측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회귀모형
 - ② 시계열자료분석
 - ③ 투입-산출 분석
 - ④ 계획의 평가검토기법(PERT)
 - ⑤ 경로분석
- (답) ②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예측방법이란 예견 즉,

이론적 예측(predict)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를 인과관계적 예측이라고도 한다. ②의 시계열 분석은 투사 즉, 연장적 예측(project)에 해당하며 이는 변수결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시계열적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비인과 모형에 해당한다. ④의 PERT와 CPM은 상당수 학자들이 인과관계적 예측으로 보고 있으며, ⑤의 경로분석(Path analysis)은 경향분석과 달리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인과관계적 예측에 속한다. 여기서 경로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인과분석 모형이다.

<정리> 미래예측의 유형

유형	개념	기법
이론적 예측, 인과관계적 예측-예견(Predict)	이론적 모형을 통한 인과적·연역적 예측	선형계획, 투입산출분석, 상관분석, 구간추정, 이론지도, 경로분석, 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상관분석, 인과분석, PERT, CPM 등
연장적 예측, 시계열적 예측-투사(Project)	추세연장이나 경향분석 등을 귀납적·보외적 예측	외삽법, 시계열분석, 구간의 추정, 선형경향추정, 지수가중법, 자료전환법, 격변방법 등
직관적 예측, 주관적 예측-추측(ajecture)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판단적·질적 예측	브레인스토밍, 전통적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 분석, 역사적 유추 등

☛ 2009 9급 선행정학 p.346

5. 균형성과평가(BSC)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내부업무과정적 관점
 - ② 학습과 성장적 관점
 - ③ 재정적 관점
 - ④ 환경적 관점
 - ⑤ 고객의 관점
- (답) ④ 환경적 관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BSC의 4대 관점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관점, 재무 관점, 고객 관점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 p.1218

6.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기능중복의 제거
 - ②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 ③ 관리과학의 활용
 - ④ 책임의 재규정
 - ⑤ 분권화의 확대
- (답) ③ 관리과학기법 등은 기술적·공리적 관점의 점

근범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 p.1184

7. 대표관료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수집단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②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 ③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 ④역차별 문제를 유발한다
 - ⑤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한다.
- (답) ③ 대표관료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 및 전문성을 저해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 p.634

8. 합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Weber는 관료제를 형식적 합리성의 극치로 설명하고 있다.
 - ②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가 반드시 집단적 합리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합리성은 본질적 행정가치보다는 수단적 행정가치에 포함된다.
 - ④ Simon의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⑤ Diesing의 기술적 합리성은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 (답) ④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H.A.Simon은 내용적 합리성이라 하였다. 절차적 합리성은 인간의 인지능력에 입각한 제한된 합리성을 말한다.

<정리> Simon의 합리성 유형

- (1) 내용적(substantive) 합리성 : 효용이나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를 말하는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행정의 내용적(실질적) 합리성 여부는 목표성취에의 기여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 결과적·객관적 합리성과 연관되며 Simon은 인간의 인지능력상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이러한 내용적 합리성을 포기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
- (2) 절차적(procedural) 합리성 : 의식적인 사유과정을 말하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력(cognitive power)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으로 Simon은 의사결정의 만족모형에서 이러한 합리성을 중시. 결과보다는 인지적·지적 과정을 중시하는 주관적·과정적·제한된 합리성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 p.140

9. 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예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지역 간 균형발전
- ㄴ. 포장된 도로의 비율
- ㄷ. 도로포장을 위해 이용된 중장비의 규모
- ㄹ. 차량의 통행 속도 증가율

- ① ㄱ-영향 ㄴ-투입 ㄷ-산출 ㄹ-결과
 - ② ㄱ-영향 ㄴ-산출 ㄷ-투입 ㄹ-결과
 - ③ ㄱ-산출 ㄴ-투입 ㄷ-결과 ㄹ-영향
 - ④ ㄱ-결과 ㄴ-산출 ㄷ-영향 ㄹ-투입
 - ⑤ ㄱ-산출 ㄴ-투입 ㄷ-결과 ㄹ-영향
- (답) ② 공공서비스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핵심이다. 이는 성과계획 수립단계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척도이다.

<정리> 성과지표의 종류

- (1) 투입지표(input) : 사업에 투입된 시간이나 비용, 노력, 장비의 절감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도로건설·포장사업의 경우 사업비 절감액이나 사업비 지출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 과정지표(process) : 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각 단계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공사진척률이나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민원해결 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3) 산출지표(output) : 1차적인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도로증가 비율이 이에 해당한다.
- (4) 결과지표(result) :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차량통행속도증가율이 이에 해당한다.
- (5) 영향지표(impact) : 사회에 미친 최종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지역사회경쟁력 제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 p.1216

10. 예산과정에서 점증주의 모형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점증주의는 결정자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한다.
- ② 총체주의와 달리 결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할 수 없다고 본다.
- ③ 기존의 예산과 조금 차이가 나는 대안을 검토하여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 ④ 결정상황을 제약하는 비용, 시간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자는 것이다.
- ⑤ 비용편익분석, 선행계획법 등 계량적 모형을 이용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사업목

-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답) ⑤ 비용편익분석, 선형계획법 등 계량적 모형을 이용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합리모형에 해당한다.
- ❖ 2009 9급 선행정학 p.1028

11.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 ② 면허 방식에서는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
 - ③ 보조금 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에 적합하다.
 - ④ 구입증서(voucher) 방식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 ⑤ 계약 방식에서는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답) ① ①은 자조활동이 아니다. 자원봉사자 방식(Volunteer)에 해당한다. 주요 민간위탁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리> 주요 민간위탁 방식

- (1) 계약방식(Contracting) : 정부가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민간조직은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자가 된다. 이 방법은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2) 면허 방식(Franchising) : 민간 조직에 일정한 구역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으로서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
- (3) 보조금 방식(Subsidy) : 민간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해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에 적합하다.
- (4) 구입증서 방식(voucher)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 (5) 자원봉사자 방식(Volunteer) :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

- 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 (6) 자조활동(self-help) 방식 :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이웃감시, 주민순찰, 보육사업, 고령자 대책, 문화예술사업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 (7)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 : 보조금 방식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내면서도 비용은 적게 소요되는 방식으로 대체교통 수단장려(규제) 또는 쓰레기 수집이나 도로청소 장려(조세유인제도) 등에 적합하다.
- ❖ 2009 9급 선행정학 p.110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계층구조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 ① 시-도, 시-군간 협력 행정이 미흡하여 갈등을 증대시킨다.
 - ② 도와 시-군간 엄격한 기능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 ③ 시-군-구에 대한 시-도의 통제기능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 ④ 동일 지역 내 행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
 - ⑤ 다층 구조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대되고의 사전달 왜곡이 발생한다.
- (답) ② 우리나라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간, 단체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간 기능배분이 모호하다. 특히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배분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정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도와 시-군간 기능배분이 모호하기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하는것이다.
- ❖ 2009 9급 선행정학 p.1284

13. 아래 기술된 항목 중 후기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짝지어진 것은?

- ㄱ. 배경은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월남전에 대한 반전데모 및 경제정체에 대한 저항 등 미국사회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 ㄴ. 1960년대 중반부터 존슨 행정부가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하류층-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의 추진에 지적 자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던 정치학에 대한 비판
- ㄷ. 인간을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고 행정의 원리들을 발견하는데 주된 관심을 기울임
- ㄹ. 사회과학자들은 그 사회의 급박한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의무, 그리고 정책내용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따라서 부패척결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소극적 측면(필요조건)이지 적극적 측면이 아니다.

❖ 2009 9급 선행정학 p.941

17. 다음은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아래설명에 가장 가까운 접근방법은 ?

· 각종 정치·행정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 그 결과 이들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가 된다.
· 소위 발생론적 설명(genetic explanation)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
- ② 관리기능적 접근방법
-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
- ④ 역사적 접근방법
- ⑤ 행태론적 접근방법

(답) ④ 제시문은 역사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역사적 접근법은 행태론 성립 이전 미국 정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던 전통적 접근방법 중의 하나로 사건이나 정책의 발생과 기원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는 발생론적 접근법(Genetic Explanation)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거를 잘 이해하면 현재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표적 학자로는 Gulick의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의 행정적 성찰’, L.D.White의 4부작(‘연방주의자’, ‘제퍼슨주의자’, ‘잭슨주의자’, ‘공화주의자’), Ripier의 ‘미국공무원제도사’ 등이 있다.

❖ 2009 9급 선행정학 p.234

18 다음 동기부여이론 내용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것은 ?

- ① Theory X는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소하는 전통적인 관리접근법이다.
- ② Maslow는 낮은 순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순위의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 ③ Herzberg의 동기요인은 책임감, 정책과 행정, 업무조건, 인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Alderfer는 Maslow의 5단계 욕구범위를 3가지로 수정하여 욕구좌절에 따른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dams는 형평성의 비교과정을 투입에 대한 만족의 비율로 설명하고 있다.

(답) ③ 책임감 및 인정감은 동기요인에 해당하나 정

책과 행정(관리), 업무조건 등은 위생요인(불만요인)에 해당한다. 다만, ①의 경우 ‘복종에 대한 통제의 감소’가 ‘복종을 얻어내기 위한 통제의 감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이 지문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복종할 경우 통제의 감소’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맞는 지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복종에 대한 통제의 감소’는 ‘복종에 대한 통제의 강조’의 오자로 보인다.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은 분명 ③으로 보인다.

<정리> Herzberg의 욕구중족 2개요인 이론

요인	위생요인(불만요인)	동기요인(만족요인)
성격	물리적·환경적·대인적 요인(직무맥락 또는 근무환경요인)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직무요인)
예	정책과 관리, 임금, 지위, 안전, 감독, 기술, 작업조건, 조직의 방침과 관행, 개인상호간의 관계(감독자와 부하, 동료상호간의 관계) 등	성취감(자아개발), 책임감, 인정감, 승진,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보람, 직무충실, 성장 및 발전 등

❖ 2009 9급 선행정학 p.522

19. 다음 정책유형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 ① 구성정책은 조세, 병역, 물자수용,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
- ② 분배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 ③ 상징정책은 국민전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 ④ 재분배정책은 돈이나 재산, 권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 ⑤ 규제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답) ① 조세, 병역, 물자수용, 노력동원 등은 Almon & Powell이 분류한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구성정책이란 Lowi가 제시한 정책으로 정부기관의 신설, 행정구역 개편 등과 관련된 체제 유지정책을 말한다.

❖ 2009 9급 선행정학 p.299

20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기관의 관할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 의 소관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소관사무도 처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⑤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답) ① 주의해야할 문제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처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내에서 소속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①은 틀리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있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소관사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당해사무가 지방자치정부 소속인지 중앙정부 소속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발생한다(②). ③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이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밑에 설치된 읍·면·동 등을 말한다. ④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⑤의 경우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능은 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다만, 이 문제는 그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정답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①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부서에 소속하여 특수 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므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있을 수 있다는 점과 ③의 경우 자치단체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교육구청장 및 소방서장)를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청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에 근거할 때 정답이 ③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하급행정기관은 읍·면·동을 지칭하므로 정답은 ①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009 9급 선행정학 p.1305